

유로 경제권 위기(그렉시트)의 배경과 전망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

반복되는 유로존 경제 위기

유로 경제권의 위기 상황이 진정되지 않고 수년 동안 반복되고 있다. 경제 위기의 진앙지는 공교롭게도 유럽 헬레니즘 문화의 발상지인 그리스다. 그리스는 막대한 재정 적자를 이기지 못해 2010년 4월에 처음으로 유로존(EU)에 구제 금융을 신청했다. 이후 같은해 11월에 아일랜드가 2011년 4월에는 포르투갈이 구제 금융을 요청했다. 스페인, 이탈리아 등도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 이 나라들은 피그(PIIGS) 국가들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오명마저 얻게 되었다. 그리스는 1차 구제 금융을 신청한 이후 2011년 11월까지 무려 6차례에 걸쳐 지원을 받았다. 올해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유로 경제권의 위기 상황은 진정되는 듯싶었다. 그리스가 2차 구제 금융을 받기 위해 대대적인 재정 긴축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리스가 안정되면 유럽의 경제 상황도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유럽 25개국은 2012년 3월에 2013년 발효를 목표로 하는 '신재정협약'을 체결하고 재정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도까지 마련하였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그리스 사태는 2012년 5월에 접어들면서 다시금 악화되고 있다. 국가 부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아예 유로존 탈퇴설(Grexit)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리스의 정치 상황이 급변하여 유로존의 지원 여부가 불확실해진 까닭이다. 지난 5월 6일 그리스는 총선에서 급진 좌파 성향의 정당들이 선전하고 집권당인 사회당은 참패를 당하여 연정 구성에 실패하였다. 금융 지원의 전제 조건인 긴축안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의견이 높아진 결과로서, 긴축안 실행이 어려울 경우 독일 등은 지원 불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받게 될 구제 금융액은 작년말까지 제공된 730억 유로보다 무려 2배가 넘는 1,640억 유로에 달한다. 그리스의 운명은 6월 17일에 예정된 재선거 결과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다. 올 3월에 합의된 긴축안이 예정대로 추진되어 그리스가 안정을 되찾는 경우, 그리스의 긴축안 거부와 유로존 탈퇴로 인한 유럽 경제의 파국, 긴축안에 대한 재협상 속 유로존 탈퇴 방지의 세 가지 가상 시나리오 중 가장 유력한 것은 세 번째 경우다. 어떤 정치가도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는 까닭이다. 그리스 국민들의 대다수가 긴축은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유로존 탈퇴는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독일 등 유로존의 중심 국가들도 그리스 탈퇴로 인한 EU의 붕괴를 원치 않고 있는 점도 현상 유지 가능성을 높여준다. 그리스 탈퇴로 인한 경제적 추정 손실이 막대한 점도 그리스를 달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분석기관인 경제경영연구센터(CEBR)에 따르면 그리스가 무작정 탈퇴를 선택할 경우 1조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고, 국제금융협회(IIF)도 1.3조 달러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유럽위기가 심화되면 세계 국내총생산이 2013년 말까지 2%가량 감소할 것으로 우려했다. 결국 이번 그렉시트 사태는 일단 유로존 국가들간의 협상을 통해 다시금 통합될 가능성이 크다.

유로 경제권 위기는 향후에도 당분간 지속

그럼 그리스가 유로존에 잔류하고 재협상이 진행되어 타협점을 찾으면 유럽 경제의 불안은 진정될 것인가? 아쉽지만 유럽 경제가 안정적 성장 궤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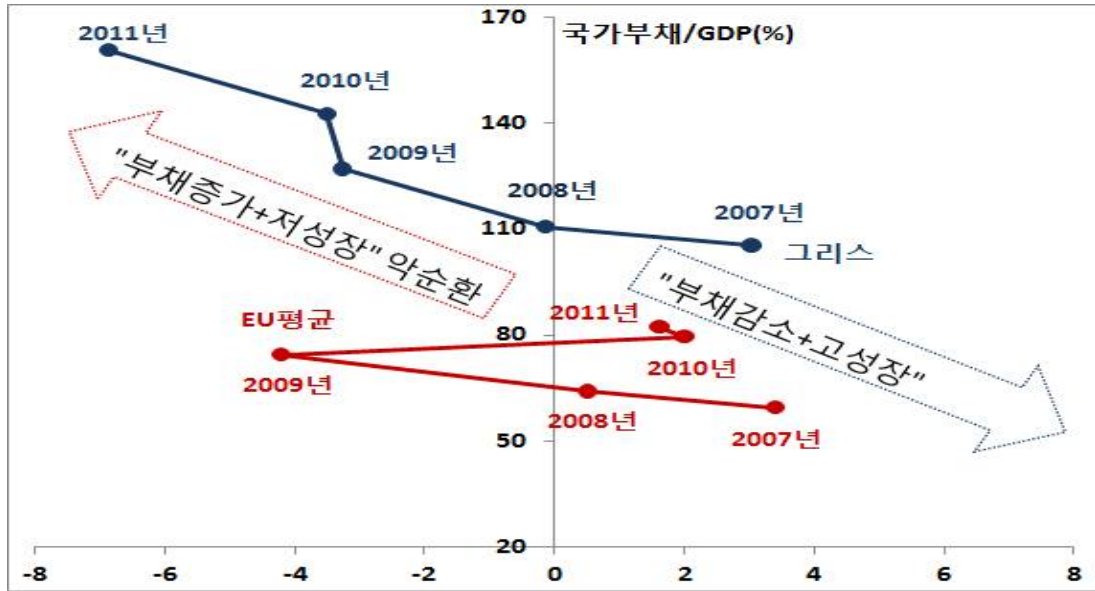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재협상을 통해 긴축안이 완화된다 해도 그리스의 재정 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위험성이 크다. 그리스의 재정 위기 배경이 매우 구조적이며 복합적이기 때문이다. 첫째 그리스는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재정적자가 증가하는 '저성장-부채 증가'의 악순환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마이너스 성장과 경상수지 적자 그리고 고실업률이라는 3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10년, 2011년 연속 -3.5%와 -6.9%의 감소 성장을 했으며 2012년에도 -4.7%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경상수지 역시 2010과 2011년 각각 229.7억 유로와 210.9억 유로의 적자를 기록했고, 실업률은 2012년 2월 현재 21.7%의 만성적인 실업 상태에 빠져있다. 극심한 경기 부진 속에서 이자 지급 규모는 갈수록 확대되어 재정적자는 계속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두번째 그리스 정부 부채의 단기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그리스 부채는 2011년말 현재 3,679.8억 유로로 전년 대비 2.1%의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특히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신규 조달된 정부 부채의 평균 만기는 각각 5.66년, 3.68년, 2.36년으로 2008년의 10.96년에 비하여 갈수록 단축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부채 중 61.5%를 외국에서 보유하고 있어 상환과 이자 지급 부담이 과도하게 높은 처지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그리스가 부채 상황 등으로 인해 2011년에 조달해야 할 자금은 GDP대비 24%인 744억 달러였고, 2012년에는 이보다 큰 26%인 815억 달러에 이른다. 세번째는 긴축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재와 정치권 분열로 경제 안정화가 힘들어지고 있는 점이다.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임금과 연금 삭감 등 긴축조치에 항의하는 총파업이 공공노조연맹과 노동자총연맹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정치권 분열로 자구 노력도 지체되고 있다. 설령 그리스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유럽에는 이보다 더 폭발성이 높은 보이지 않는 대형 지뢰들이 깔려 있다. 우선은 그리스와 함께 구제 금융을 받은 포르투갈이 걱정거리다. 이들 나라들만큼이나 최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나라는 스페인이다. 유럽에서 스페인이 차지하는 경제 비중은 8.6%로 유럽 5위이며 1.7%인 그리스보다 무려 5배가 크다. 스페인의 경제 위기가 유럽이나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스페인 역시 마이너스 성장과 유럽 최고의 실업률에 시달리고 있고 재정적자도 지속되고 있으며, 은행 부실과 민간부문 채무 규모가 갈수록 늘고 있다. 스페인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68.5%이고, 은행의 대출 손실은 최대 2,600억 유로로 38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스페인의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현재 8.5%로 EU에 제출한 2011년 재정적자 비율 목표인 6.0%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2012년 목표는 당초 4.4%에서 5.3%로 상향 조정했다. 스페인 다음으로는 이탈리아 등이 또 다른 재정위기 고위험 국가로 거론된다. 이탈리아 역시 저성장, 고실업, 재정적자 확대라는 고질병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유로 경제권 위기의 근본 배경과 교훈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8%에 달하여 미국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유로 경제권이 경제위기 함정에 빠져 버린 데는 출범할 때부터 안고 있는 태생적 한계 때문이다. 첫째는 유로존 지배 체제의 결함이다. 처음 유로존을 구상할 때 정치경제적 여건이 서로 상이한 국가들을 원활히 통제하고 규율할 수 있는 명확하고 견고한 지도 운영 체제를 만들지 못한 것이다. 두 번째는 국가간 경쟁력 격차다.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은 대규모의 경쟁력이 높은 나라들과 그리스, 아일랜드와 같은 소규모의 경쟁력이 낮은 국가들이 동일한 가치를 지닌 단일 통화를 사용하면서 경쟁력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독일 등은 유로존의 이익을 향유하는 한편 그리스와 같은 소국들은 오히려 저성장과 경상수지 적자 확대라는 불

이익을 감수하게 된 것이다. 세 번째는 강력한 전염 효과(contagion effect)가 존재하는 점이다. 유로존 국가들은 금융과 무역 거래상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그리스 한 나라가 재정 파탄에 이르게 되면 주변 국가들의 금융 기관과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 그리스의 긴축 완화 요구 목소리가 커지면서 세계적인 경제학자들간에 긴축과 성장에 대한 대논쟁이 일고 있다. 미국의 노벨 경제학자 로버트 배로 등은 독일의 메르켈 총리처럼 '긴축 유지론'을 주장한다. 긴축 완화를 통한 확장적 재정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경제 성장 효과없이 국가 부채의 누적만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역시 미국의 노벨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 교수나 크루그만 교수 그리고 대표적인 경제 비관론자인 루비니 교수 등은 '성장 우선론'을 역설한다. 이들은 모두 유로존의 지나친 긴축은 자살 행위로 간주하고 이제는 긴축이 아닌 성장 정책을 펴야 함을 강조한다. 현실적인 해법은 거대 담론보다는 상식선에서 찾을 수 있다. 주어진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한편 땀 흘려 돈을 더 버는 일을 동시에 추진해야 유로존 국가들은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 국가들의 경제 비극은 한국에 값진 시사점을 준다. 국내 경제가 지속적으로 견실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쟁력있는 산업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무분별한 복지 확대는 당장은 달콤하나 멀리 보면 한국 경제를 망치는 치명적인 독소가 된다는 점이다.

<국가부채비중 및 경제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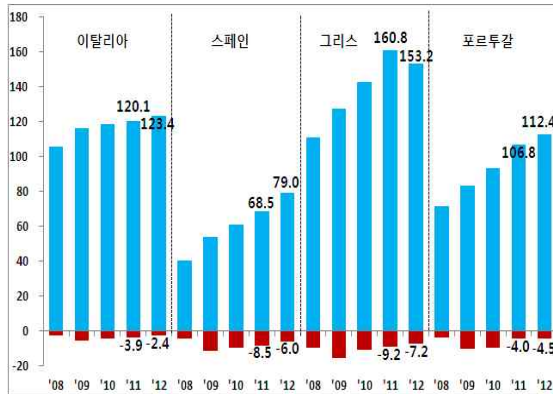


자료 : IMF

주 : 우측 그림의 X축은 GDP성장률, Y축은 국가부채/GDP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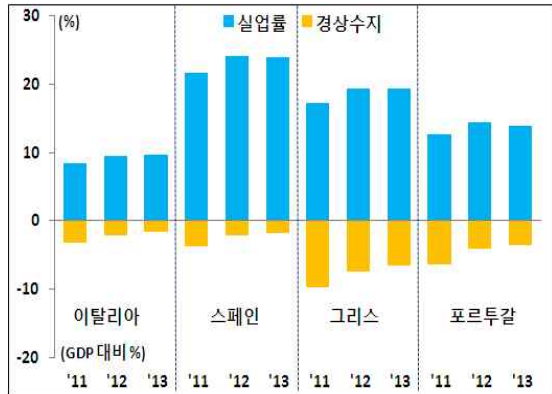
이동선이 좌상향으로 이동할수록 '부채증가-저성장의 악순환'에 놓여 있음을 뜻함

<재정위기국의 국가부채·재정적자>



자료 : IMF

<재정위기국의 실업률·경상수지>



자료 : IMF

※ 단위는 각각 GDP 대비 비중(%) 임